

대통령 선거 주요후보자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마련공약은 매우 불충실

• 대선후보 5인의 선관위 10대 공약 재원조달 충실도 : 5점만점에 1.72점

■ 법률연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10대 선거공약의 재원마련 충실도 조사 발표 ■

1.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NGO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전문성 있는 선거감시, 국회의원·전국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감시활동을 연중 정밀 시행하고 있으며,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대선후보자 5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한 10대 공약 중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법률연맹은 공약의 충실도 분석을 공직선거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요인인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조사·분석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3에 의해 후보자별 성적을 공개할 수 없어 전체 평점만 공개하는 것임 <평가개요는 19페이지 참조>

2.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들의 10대 공약 구성성과 충실도 중 재원마련방법을 분석해 본 결과, 공약의 재원조달방법 충실도가 1.72점(5점 만점 기준)도 되지 않았다.”고 분석·평가하고, “공약의 이행은 그 공약의 필요성, 적합성, 우선성, 실행가능성 등을 바탕해야 할 터임에도, 흔들림없는 국정철학도 없이 표를 의식해서 우선 그럴싸하게 발표(공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유권자들을 위하여 공약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충실도 등을 조사 분석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 대선후보의 선관위에 등재한 10대 공약 제목부터가 대부분 모호하고 추상적
- 일자리 살리기에 증세(4후보 공통)와 대기업 감세(홍준표 후보)로 확실히 달라
- 대부분 후보들은 표를 의식해서인지 ‘증세’ 보다 ‘재정지출 절감’ ‘민간참여·주도 투자’ ‘예산조정’, ‘예산전환’ 등으로 재원조달하겠다고 — 거의 공통적임
- 공약을 실천에 옮길 경우에 필요한 총예산과 세부 예산내역을 거의 밝히지 않음
-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제시함
- 이행방법(세부공약)별로 예산추계, 재원조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임.

붙임 :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공약의 재원마련 충실도 분석결과

(홈페이지 WWW.GOODLAW.ORG 게시). 끝.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담당 : 홍금애 실장 / 윤소라 부장>

대통령 선거 주요후보자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마련공약은 매우 불충실

• 대선후보 5인의 선관위 10대 공약 재원조달 충실도 : 5점만점에 1.72점

■ 법률연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10대 선거공약의 재원마련 충실도 조사 발표 ■

- 대선후보의 선관위에 등재한 10대 공약 제목부터가 대부분 모호하고 추상적
- 일자리 살리기에 증세(4후보 공통)와 대기업 감세(홍준표 후보)로 확실히 달라
- 대부분 후보들은 표를 의식해서인지 ‘증세’ 보다 ‘재정지출 절감’ ‘민간참여·주도 투자’ ‘예산조정’, ‘예산전환’ 등으로 재원조달하겠다고 — 거의 공통적임
- 공약을 실천에 옮길 경우에 필요한 총예산과 세부 예산내역을 거의 밝히지 않음
-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제시함
- 이행방법(세부공약)별로 예산추계, 재원조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임.

I 공약 충실도 분석 결과

1. 주요 대선후보자 10대 공약의 문제점

가. 공약제목부터 모호함 -- 구체적인 내용은 이행방법을 통해서나 알 수 있어

중앙선거위에 게시된 10대공약은 선거명, 후보자명, 기호, 소속정당명, 공약순위, 공약제목(공약명칭), 공약분야, 목표,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후보자들의 공약명칭을 보면 쉽게 무슨 내용의 공약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약제목부터가 모호하여 그 이행방법을 보고서야 그 공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기호 1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순위 공약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라고 하고 있는데, 내용은 정치분야 공약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추진, 재벌의 불법경영승계·황제경영·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등을 이행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호 2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8순위 공약에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이라고 하고 있는데, 환경/문화관광분야 공약으로,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보호를 이행방법으로 하고 있다.

기호 3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6순위 공약에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I -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이라고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분야 공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등 8개 이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나. 대선후보자별 공약 자원마련 충실도가 5만점에 겨우 1.72점에 불과

대선후보자들의 공약 충실도를 분석해 본 결과, 공약의 이행방법에 있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술하였으나, 이행기간 및 자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했다.

5개 정당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의 자원조달방법 충실도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1.72점에 불과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자원조달방법(자원마련) 충실도 평가 기준》

점수	평가기준
0점	언급하지 않은 경우
1점	① 예산만 단순언급되어 있고, 방법이 없는 경우 ② 예산액이 없고, 방법이 포괄적으로 단순 언급한 경우
2점	① 예산이 단순 언급되어 있고, 조달방법이 포괄적으로 단순언급되어 있는 경우 ② 예산금액이 없고, 조달방법이 3개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경우 ③ 예산이 필요 없는 비예산 공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예산소요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3점	① 예산이 언급되어 있고, 조달방법이 3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 ② 예산이 필요 없는 비예산 공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과 조달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4점	○ 예산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조달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단계별 예산 추계 및 조달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5점	① 예산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조달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예산 확보가 거의 확정된 경우 ② 각 단계별 예산 추계 및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5개 정당 후보자들의 공약분야별 자원마련 충실도 점수는 보면,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공약 자원마련 충실도가 가장 저조한 1.17점이고, 그다음으로 환경, 문화관광 공약이 1.40점, 안보(국방, 외교통일통상)공약이 1.60점 순으로 충실도 점수가 저조하였다.

《공약분야별 공약의 자원마련 충실도》

공약분야	자원마련 충실도 평균점수	최고 점수	최저 점수
안보(국방, 외교통일통상)공약	1.60	2	1
노동 여성 공약	2.11	2.5	2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	2.00	2	2
복지 공약	1.67	2	1
재정경제 공약	1.83	2	1.5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1.67	2	1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공약	1.17	2	1
환경, 문화관광 공약	1.40	2	1
계	1.72	2.06	1.31

다. 공약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총예산이나 세부예산내역을 파악할 수 없음

기호 1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순위 공약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대해서는 5년간 21조원(연평균 4.2조 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으나,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와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기호 2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1순위 공약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군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 공세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 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기호 3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1순위 공약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서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안보 구현을 위해 해군, 공군의 전력대폭 확대, 전력무기 대폭증강, 킬 체인과 KAMD 조기 완료, 합동참모본부에 전력사령부 창설,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 국방과학기술 발전시켜 첨단 국방력 확보를 위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가 나와 있지 않

고,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의 3%까지 전반적 증액(5년간 약 10조 추가소요)만 한다고 하여 총 소요 예산은 나와 있지 않다.

기호 4번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1순위 공약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에서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22년까지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유권자들은 알 수 없다.

기호 5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1순위 공약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에서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7가지, 과감한 자치분권과 행정개혁 실현 7가지, 세월호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로 전환 9가지,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 9가지의 공약을 이행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별도 증액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로 전환에서 9번째 원재료 기준 GMO완전표시제 실시, 방사능오염 먹거리규제, 모든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 등만 보더라도 예산소요가 자명하고, 법과 제도 개정에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무려 32가지 공약을 실천하는데 별도증액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 재원조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아예 나와 있지 않음

기호1번 **문재인** 후보의 7순위 공약인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에서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 연평균 4.4 조원 추가 소요가 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지가 나와 있지 않고,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으로 연평균 0.8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재원조달방법은 역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기호 2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3순위 공약인 ‘서민 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서 영유아에게 가정양육수당(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혼용지급)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 이하 지원액 2배 인상, 초중고생 소득 하위 50%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약

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조달방법에서는 포괄적으로 각 부처에 산재한 500여개가 넘는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의 유사,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렇게 해서 조달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만으로 복지공약 전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기호 3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2순위 공약인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 R&D예산 19조원을 조정하여 재원 마련 및 세출 통해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19조원의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고 분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기호 4번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2순위 공약인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에서 비정규직 획기적으로 축소,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 도달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재원조달방안에서는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기호 5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순위 공약에서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을 하면서 주로 증세를 통해 재원조달을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도 10대 공약의 각 개별공약에 소요예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증세만으로 전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재원을 모두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2. 합리적 유권자 선택과 정책선거를 위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제안

가. 10대 공약은 대통령 후보자가 임기중 추진할 가장 중요한 공약을 10개 선정하여 **공직선거법 제66조 제2항이 정한 대로** 공약의 목표, 이행절차, 재원마련,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나. 10대 공약은 선거공약서의 내용을 단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공약을 선정하고, 공약의 목표에 공약을 제시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자세히 제시하고, 각 **이행방법마다 총 소요예산과 이행**

시기를 명시해야 하며,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자원조달 방법과 이행플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10대 공약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접근가능하여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청소년공약’이라고 검색하면 해당 공약이 쉽게 검색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 특히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르게 선거가 끝나면 공약이행에 대해 관리하는 부서도 없고 국민이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 볼 수조차 없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공약이행에 대해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분야별(중앙선관위 분류기준) 공약의 자원조달방법 충실도 비교

가. 국방/외교통상통일(안보) 공약

안보공약의 자원조달마련에 대한 충실도 분석결과 평균점수가 1.6점에 불과했다. 최고점은 2점, 최저점은 1점이다.

대부분 후보들이 안보공약의 자원마련에 있어서 증세보다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세 등의 도입 등 증세를 통해 해결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예산의 비중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의 경우에는 GDP의 3% 수준을 점진적으로 증대한다고 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GDP의 3.5% 수준까지 증액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안보공약의 자원조달방법 만점공약 예시》

북핵 대응 자주 국방 대응체제 구축

예산소요금액 : 약 2조원(연평균) / 약 10조원(5년간)

자원마련방안(연간) : 국방비를 연차적 GDP대비 3.5%까지 확대하여 점진적 증액 1.3조 /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불용액 등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방부 예산 개혁 등을 통한 추가예산확대 0.7조 / 예비비 조성 5,000억

《대선후보들의 안보공약의 자원조달방법》

기호	정당	후보자명	우선순위	공약명	자원조달방법 명시내역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4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2	자유한국당	홍준표	1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 자원 배분 ○ 낭비요소 제거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 증대 ○ 예산증가분 중 우선 반영
3	국민의당	안철수	1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1.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대비 3%까지 점진적 증액(5년간 약 10조 추가 소요) 2. 재원은 방산비리 근절 및 세출예산 조정으로 조달
4	바른정당	유승민	7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불용액 등 국방부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해결 ○ 2016년도 기준 GDP 대비 2.4%인 국방비를 3.5%까지 확대하고, 증액된 국방비를 방위력 개선 및 병영문화 개선에 투자
5	정의당	심상정	2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외교로 평화공영시대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공약 3번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의 이행방법 제1항 부가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항목(아래)에 조세개혁을 통한 자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각 개별 공약에는 예산총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아래도 같다.)

-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 ②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2,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80%로 인상, 종합부동산세(국세→지방세)로 일원화하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중부세 수준으로 인상,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 (연 16.0조원)
- ⑤ 상속공제한도 5억원으로 축소, 가격폭등 시 증여세 재계산, 세대생략 할증과세 50% 적용(연 1.5조원)
- ⑥ 초과이익공유제 기업 공유이익의 30% 세액공제, 비정규 노동자 차별시정 등 처우개선 시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
- ⑦ 월세 비용과 서민 이사비중개수수료 15% 세액공제, 배기량 2천cc미만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 ⑧ 부담금 징수 단가 현실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 강화, 탈세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조달 참여 배제, 부정부당 입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삼진아웃제 강화
- ⑨ 국민소송법 제정,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국가재정정보 상세 공개, 증액예산요청 의원 실명제 도입 및 쪽지예산 근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나. 노동, 여성 공약 : “세수확대” 보다 “효율적 배분” 강조

노동, 여성 공약의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충실도에 있어서 평균점수가 2.11점에 불과했다. 최고점은 2.5점, 최저점은 2점이었다.

대부분 후보들이 증세보다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세 도입 등 증세를 통해 해결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는 재원조달에 있어서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하여, 세입확대를 증세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기호2번 홍준표 후보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다.

기호3번 안철수 후보는 예산조정을 통해서 재원조달을 하고 있다.

기호4번 유승민 후보는 칼퇴근 등 비예산분야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예산소요되는 부분은 예산조정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동, 여성공약의 재원조달방법 만점공약 예시》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예산소요금액 : 4.2조원(연평균) / 21조원(5년간)

재원마련방안(연간) : 재정지출개혁을 통한 일반예산 2.1조 / 법인세 등의 인상을 통한 추가세입확대 1.1조 / 일자리 기금 마련 5,000억 / 예비비 조성 5,000억

《대선후보들의 노동, 여성공약의 재원조달방법》

기호	정당	후보자명	우선순위	공약명	재원조달방법 명시내역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1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5년간 21조원(연평균 4.2조원) 소요 ○ 창업국가 조성 :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출 예산 편성 조정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6	성 평등한 대한민국	○ 성평등위원회 설치: 기존 일반회계 예산 편성 ○ 출산수당: 연 4,800억 소요
2	자유한국당	홍준표	10	저출산 극복과 청년복지 확대에 대한 민국에 활기를	○ 예산 증가분(매년 약 3.5% 증가 예상)을 저출산 해결과 청년복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 ○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조정, 복지 전달체계 개편, SOC 완료사업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
3	국민의당	안철수	4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III -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1. 청년고용보장계획 관련 예산은 현재 매년 17조에 달하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할 계획임 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은 교육예산과 연계된 사업으로, 교육분야 예산을 조정하여 조달할 계획임 3. 신성장산업 발굴 및 지원은 경제분야 및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추계 충당할 예정이며,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이거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소요가 필요하지 않음
			8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III -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1.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약 8,000억 원(2017년 기준)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재원(실업급여 계정 상 모성보호지원급여)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상향하여 단계적으로 증액할 예정이고, 장애아동 및 치매가족 돌봄자를 위한 돌봄가족휴식일 도입에 필요한 추가 예산 등과 함께 세출조정으로 충당함.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범죄피해자 기금에서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 전환 후 세출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임
4	바른정당	유승민	1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제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필요 재원 확보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는 육아휴직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확충 ○ 공공어린이집 확대,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2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칼퇴근 문화 정착과 돌발노동 제한, 최저임금 인상은 재정 투입 방식이 아닌 제도 개혁을 통한 민간의 참여와 법적 의무 이행, 투자 확대가 중요 ○ 한시적인 영세업체 4대 보험료 지원 및 관대한 고용보험: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에 재정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관련 예산 확보
5	정의당	심상정	4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조세공약 참조)
			5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 사회 실현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조세공약 참조)

다.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개혁)공약 : 비예산으로 예산소요 표시 없음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개혁)공약의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충실도의 평균점수는 2점이다. 최고점 및 최저점이 모두 2점이다.

주로 법과 제도개혁 등을 통한 공약이행방법을 제시하면서 비예산 사업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소요예산의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공약은 있을 수 없다. 예산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예산항목과 금액, 조달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일반예산을 사용하고 다른 부분은 비예산이라고 하고 있다.

기호2번 홍준표 후보, 기호3번 안철수 후보, 기호4번 유승민 후보와 기호 5번 심상정 후보 역시 개혁공약은 법률개정 사항으로 비예산공약이라고 하고 있다.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공약의 재원조달방법 만점공약예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헌법 또는 법률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소요 발생요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공청회 개최, 설치 이후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일부 행정비용 등의 재정요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소요금액 : 예산총액 000원 / 공청회 개최 000원 / 조직 개편 000원

재원마련방안(연간) : 정부의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재정으로 충당

《대선후보들의 개혁(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공약의 재원조달방법》

기호	정당	후보자명	우선순위	공약명	재원조달방법 명시내역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2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일반회계 예산 활용 ○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추진 : 법률개정사항으로 비 예산 사업임
			3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 법률 및 제도 개선사항으로 비 예산 사업임
2	자유한국당	홍준표	7	부패 척결과 공공부분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 대부분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 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 조달 불필요(비예산)
3	국민의당	안철수	5	국민 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 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정치	1. 대부분 헌법 또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 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미함 2. 일부 조직개편에 따른 재정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따라 필요 재원의 규모가 달라짐. 대부분 정부의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재정으로 충당함

					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은 시행 시 행정비용 발생. 이는 재정으로 충당
4	바른정당	유승민	10	권력기관을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 법·제도 개혁으로 별도의 소요 예산 없음
5	정의당	심상정	1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국민 주권형 정치개혁	별도 증액 예산 불필요

라. 복지(보건복지)공약 : 복지수요는 있으나 재원마련 방법은 부족

보건복지공약의 재원조달방법 충실도 평균점수는 1.67점에 불과하다. 최고점은 2점, 최저점은 1점이다.

대부분 후보들이 재원조달방법으로 증세보다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세 도입 등 증세를 통해 해결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개별공약에서 소요되는 예산액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는 기초연금 확대에 의한 재정소요와 일자리 재정소요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조달방법은 표시하지 않고 있다.

기호2번 홍준표 후보는 각 부처에 산재한 500여개가 넘는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의 유사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떨어졌다. 그밖에 탈루소득 발굴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역시 너무 포괄적이며, 추상적이었다.

기호3번 안철수 후보는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조정, 고용보험 재정 등으로 조달하겠다고 있다.

기호4번 유승민 후보는 세출구조개선을 통해서 재원조달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보건복지 공약의 재원조달방법 만점공약예시》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 실현

예산소요금액 :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재원마련방안 :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조정, 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한 일반예산 확충 2조 / 법인세 등의 인상을 통한 추가세입확대 1.4조 / 노인복지기금 5,000억 / 예비비 조정 5,000억

《대선후보들의 보건복지 공약의 재원조달방법》

기호	정당	후보자명	우선순위	공약명	재원조달방법 명시내역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7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2	자유한국당	홍준표	3	서민 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각 부처에 산재한 500여개가 넘는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의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원 마련
			5	서민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조성	○ 탈루소득 발굴 및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정강화를 통해 세입 확충
3	국민의당	안철수	6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I -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조정, 건강보험·고용보험재정으로 조달
4	바른정당	유승민	3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세출 구조 조정 및 세제 개편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 복지 예산 집행 체계를 투명화하고, 행정비용 절감을 통한 복지 지출 누수 현상을 제거하여 예산 확충
5	정의당	심상정	7	보육, 의료, 노후안심복지 실현	사회복지제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조세공약 참조)

마. 재정경제 공약

재정경제공약의 재원조달방법 충실도는 평균 1.83점이다. 최고점은 2점, 최저점은 1.5점이다.

대부분 후보들이 기업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치중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계획은 대부분 정책이나 기업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소요가 없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재정경제공약으로 하고 있는 청년구직 촉진수당 5,40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재원조달방법은 없다.

기호2번 홍준표 후보는 기업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기호3번 안철수 후보는 법률개정사항으로 추가 재원이 크지 않다고 하고 있다.

기호4번 유승민 후보는 민간참여의 투자 인프라를 강조하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조하고 있다. 자영업대책에 있어서는 재정소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호 5번 심상정 후보는 조세개혁을 통한 조세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재정경제 공약의 재원조달방법 만점공약 예시》

공정거래 관련 특별법 제정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제도 개혁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소요 발생요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 제·개정과 관련된 공청회 개최, 제·개정 이후 민간의 참여와 홍보를 확대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비용 등의 재정보요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예산소요금액 : 공청회 개최 000원 / 조직 개편 000원 예상

재원마련방안(연간) : 정부의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재정으로 충당

《대선후보들의 재정경제 공약의 재원조달방법》

기호	정당	후보자명	우선순위	공약명	재원조달방법 명시내역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5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셰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2	자유한국당	홍준표	2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3	국민의당	안철수	3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II -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 재원은 크지 않음
4	바른정당	유승민	4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창업 환경 조성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는 관련 법 제·개정 및 제도 개혁을 통해 가능하고,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은 세제 개편 및 조세 개혁으로 가능
			5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활용하며, 메이커스랩은 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의에 따라 지원 비율을 정하며, 기존 공간을 주로 활용 하므로

					기존 예산에 큰 부담 없이 추진 가능 ○ 자영업 대책은 모두 법 개정이나 규제조치여서 재정소요는 많지 않음.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지원의 재원은 국고지원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5	정의당	심상정	3	조세개혁과 등 재벌개혁 정의로운 경제	조세개혁은 다른 공약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임

바.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의 재원조달방법 충실도는 평균 1.67점이다. 최고점은 2점, 최저점은 1점이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는 소요예산은 추계하고 있으나, 재원조달방법은 추상적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기호2번 홍준표 후보는 예산증가분 사용과 창업·투자펀드를 통한 재원조달을 강조하고 있다.

기호3번 안철수 후보는 국가기술개발 19조원 편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올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기호4번 유승민 후보는 대부분 제도 변경에 대한 공약으로 기존 예산 전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기호 5번 심상정 후보는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공약의 재원조달방법 만점공약예시》

공공어린이집 80% 확대

예산소요금액 : 연평균 4,000억 소요

재원마련방안 :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조정, 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한 일반예산 확충 2,000억 마련 / 법인세 등의 인상을 통한 추가세입확대 2,000억 마련

《대선후보들의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의 재원조달방법》

기호	정당	후보자명	우선순위	공약명	재원조달방법 명시내역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8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2	자유한국당	홍준표	4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 예산 증가분 활용
			9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재원 조달
3	국민의당	안철수	2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1 - 교육·과학기술·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	1. 학제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후 합의과정을 거쳐 단계적 시행 예정 2. 국가 R&D 예산 19조원을 조정하여 재원 마련 및 추가 세출 통해 예산확보 3.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거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소요 없음
4	바른정당	유승민	8	모두를 위한 미래 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대부분 제도 변경에 대한 공약으로 기존 예산 전환 사용 가능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의 경우 미국의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3년 정도 개발 기간에 1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교육 내실화 사업(2017년 기준 1,990억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활용은 학교의 기존 ICT인프라를 사용하면 가능
5	정의당	심상정	8	사람 중심의 교육 혁명 과학기술·정보통신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 대부분 제도 변경에 대한 공약으로 기존 예산 전환 사용 가능

사.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공약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공약의 재원조달방법 충실도는 평균 1.17점으로 최하점수를 기록하였다. 최고점은 2점, 최저점은 1점이다.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공약의 재원조달방법 만점예시》

쌀생산비 보장 (쌀 목표가격 인상, 쌀생산조정제 실시, 소비확대)

예산소요금액 : 연평균 5,000억 소요

재원마련방안 : 재정투입순위 조정을 통해 기존 예산 활용 3,000억 /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한 세제개편 2,000억

《대선후보들의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공약의 재원조달방법》

기호	정당	후보자명	우선순위	공약명	재원조달방법 명시내역
----	----	------	------	-----	-------------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9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창업·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재원 조달
2	자유한국당	홍준표	6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 대기업 세제감면 재정비를 통해 세입 확충
3	국민의당	안철수	7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II -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1. 기존 인적/물적 자원의 재배치, 지휘 체계 개선 등으로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 2. 소방/원자력 방호 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 주체는 추후 발표
			10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V -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 재정 및 조세개혁 등을 통한 정부재원 활용
4	바른정당	유승민	9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주택도시자금 활용 ○ 토지지원리츠 제도 활용
5	정의당	심상정	6	농어민·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안정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아. 환경, 문화관광 공약

환경, 문화관광공약의 재원조달방법 충실도는 평균 1.40점이다. 최고점은 2점이고, 최저점은 1점이다.

《환경, 문화관광공약의 재원조달방법 만점공약 예시》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예산소요금액 : 5,000억 소요 예상

재원마련방안 : 재정투입순위 조정을 통해 기존 예산 활용 2,500억 /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한 세제개편 2,000억 / 예비비 500억

《대선후보들의 환경, 문화관광공약의 재원조달방법》

기호	정당	후보자명	우선순위	공약명	재원조달방법 명시내역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10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2	자유한국당	홍준표	8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 예산 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3	국민의당	안철수	9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IV - 다음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1.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중북사업 정리 등 재정을 효율화하여 예산 절감 및 공약 실현 투자재원 확보 2.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비율 조정 및 재정지출 조정으로 필요재원 확보

4	바른정당	유승민	6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미세먼지 예산을 국가예산의 순위에 높게 반영 ○ 생활화학물질 대책은 규제대책 사항. 재정소요 거의 미미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은 법 개정 사항
5	정의당	심상정	9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국가로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자. 기타

기호	정당	후보자명	우선순위	공약명	재원조달방법 명시내역
5	정의당	심상정	10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희망을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4. 대선후보의 10대 공약 중 제1순위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약포털(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 2017. 4. 18. 방문)에 공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10대 공약 중 1순위 공약을 살펴본 바,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노동공약을 제1순위 공약으로 하여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호2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기호3번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안보공약을 제1순위 공약으로 하였다.

기호4번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경우에는 복지 공약을 제1순위 공약으로 하였으며,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이라고 하여 개혁형 공약을 1순위로 내세웠다.

《대선후보자별 제1순위의 공약 명칭》

기호	정당	후보자명	공약명	공약분야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노동
2	자유한국당	홍준표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외교, 국방
3	국민의당	안철수	튼튼한 자강안보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외교, 국방
4	바른정당	유승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노동, 여성
5	정의당	심상정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1. **분석주체** : 26년동안 공명선거감시 및 의정감시활동을 전문으로 한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
2. **분석목적** :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의 충실도를 분석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당선후 자신들이 제시한 공약을 보완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
3. **분석대상**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5명 중 원내정당 소속 후보자 6인 중 10대 공약을 공개한 대통령 후보자 5명 후보자의 공약을 대상으로 하였다.(별첨 공약목록 #1) 《원내정당인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자의 경우 10대 공약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내용 확인결과 7개 공약에 불과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4. **분석방법** : 10대공약에 나와 있는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66조 제2항1)에 나오는 후보자의 선거공약서에 제시하도록 강제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재원마련 평가배점은 유권자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점수를 배분하였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3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개별 점수는 생략함.

1) 공직선거법 제66조 ②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7.>

<별첨#1>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 10대 공약과 재원조달방법

기호 1 후보자명 문 재 인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순위	공약명	재원조달 방안 등	공약분야
공약순위: 1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5년간 21조원 (연평균 4.2조원) 소요 ○ 창업국가 조성 :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출 예산 편성 조정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노동
공약순위: 2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대통령 직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일반회계 예산 활용 ○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추진 : 법률개정사항으로 비 예산 사업임	정치
공약순위: 3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 법률 및 제도 개선사항으로 비 예산 사업임	정치
공약순위: 4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통 일 외 교 통 상, 국방
공약순위: 5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 청년고용활당제 : 법 개정 사항으로 미소요 ○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셰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재정경제
공약순위: 6	성 평등한 대한민국	○ 성평등위원회 설치: 기존 일반회계 예산 편성 ○ 출산수당: 연 4,800억 소요	여성
공약순위: 7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복지
공약순위: 8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교육
공약순위: 9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 쌀생산조정제, 농업복지등 예산은 재정투입순위로 조정으로 기존 예산 활용 ○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은 대부분 법령개정 사항이며, 예산	농림해양수산

		사업은 기존 예산 활용	
공약순위: 10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환경

기호 2 후보자명 홍 준 표 (소속정당명 자유한국당)

순위	공약명	재원조달 방안 등	공약분야
공약순위: 1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 재원 배분 ○ 낭비요소 제거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 증대 ○ 예산증가분 중 우선 반영	통일외교통상 / 국방
공약순위: 2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재정경제
공약순위: 3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각 부처에 산재한 500여개가 넘는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의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원마련	보건복지(1)
공약순위: 4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 예산 증가분 활용	교육 / 과학 기술 정보통신
공약순위: 5	서민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조성	○ 탈루소득 발굴 및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정강화를 통해 세입 확충	보건복지(2)
공약순위: 6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 대기업 세제감면 재정부담을 통해 세입 확충	농림해양수산 / 산업 자원 / 건설교통
공약순위: 7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 대부분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 조달 불필요(비예산)	정치 / 행정 자치 / 사법윤리
공약순위: 8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 예산 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환경 / 문화 관광
공약순위: 9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재원 조달	과학기술 정보통신
공약순위: 10	저출산 극복과 청년 복지 확대로 대한민국에 활기를	○ 예산 증가분(매년 약 3.5% 증가 예상)을 저출산 해결과 청년복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 ○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조정, 복지 전달체계 개편, SOC 완료사업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	여성

기호 3 후보자명 안 철 수 (소속정당명 국민의당)

순위	공약명	재원조달 방안 등	공약분야
공약순위: 1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	1.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대비 3%까지 점진적 증액(5년간 약 10조 추가소요) 2. 재원은 방산비리 근절 및 세출예산 조	통일외교통상 국방

	화제제 구축	정으로 조달	
공약순위: 2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I 교육 · 과학기술 · 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1. 학제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후 합의과정을 거쳐 단계적 시행 예정 2. 국가 R&D 예산 19조원을 조정하여 재원 마련 및 추가 세출 통해 예산확보 3.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거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소요 없음	교육 과학기술 정보통신
공약순위: 3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II 정경유착 및 불공정 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 재원은 크지 않음	재정경제
공약순위: 4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III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1. 청년고용보장계획 관련 예산은 현재 매년 17조에 달하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할 계획임 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은 교육 예산과 연계된 사업으로, 교육분야 예산을 조정하여 조달할 계획임 3. 신성장산업 발굴 및 지원은 경제분야 및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추계 충당할 예정이며,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이거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소요가 필요하지 않음	노동
공약순위: 5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 · 통합의 정치	1. 대부분 헌법 또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 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미함 2. 일부 조직개편에 따른 재정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따라 필요 재원의 규모가 달라짐. 대부분 정부의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재정으로 충당함 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은 시행 시 행정비용 발생. 이는 재정으로 충당	정치 · 행정 자치 사법윤리
공약순위: 6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I 적자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조정, 건강보험 · 고용보험제정으로 조달	보건복지
공약순위: 7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II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1. 기존 인적/물적 자원의 재배치, 지휘체계 개선 등으로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 2. 소방/원자력 방호 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 추계는 추후 발표	산업자원
공약순위: 8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III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1.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약 8,000억 원정도(2017년 기준)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재원(실업급여계정 상 모성보호지원급여)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상향하여 단계적으로 증액할 예정이고,	여성

		장애아동 및 치매가족 돌봄자를 위한 돌봄가족휴식일 도입에 필요한 추가 예산 등과 함께 세출조정으로 충당함.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범죄피해자 기금에서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 전환 후 세출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임	
공약순위: 9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IV 다음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1.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중복사업 정리 등 재정을 효율화하여 예산 절감 및 공약 실현 투자재원 확보 2.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비율 조정 및 재정지출 조정으로 필요재원 확보	환경·문화관광
공약순위: 10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V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 재정 및 조세개혁 등을 통한 정부재원 활용	농림해양수산

기호 4 후보자명 유 승 민 (소속정당명 바른정당)

순위	공약명	재원조달 방안 등	공약분야
공약순위: 1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필요 재원 확보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는 육아휴직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확충 - 공공어린이집 확대,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노동, 여성
공약순위: 2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칼퇴근 문화 정착과 돌발노동 제한, 최저임금 인상은 재정 투입 방식이 아닌 제도 개혁을 통한 민간의 참여와 법적 의무 이행, 투자 확대가 중요 - 한시적인 영세업체 4대 보험료 지원 및 관대한 고용보험: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에 재정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관련 예산 확보	노동, 여성
공약순위: 3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세출 구조 조정 및 세제 개편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 복지 예산 집행 체계를 투명화하고, 행정 비용 절감을 통한 복지 지출 누수 현상을 제거하여 예산 확충	보건복지
공약순위: 4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창업 환경 조성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는 관련 법 제·개정 및 제도 개혁을 통해 가능하고,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은	재정경제

		세제 개편 및 조세 개혁으로 가능	
공약순위: 5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자를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활용하며, 메이커스랩은 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의에 따라 지원 비율을 정하며, 기존 공간을 주로 활용 하므로 기존 예산에 큰 부담 없이 추진 가능 - 자영업 대책은 모두 법 개정이나 규제 조치여서 재정소요는 많지 않음.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지원의 재원은 국고지출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재정경제
공약순위: 6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미세먼지 예산을 국가예산의 순위에서 높게 반영 - 생활화학물질 대책은 규제대책 사항. 재정소요 거의 미미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은 법 개정 사항	환경, 문화, 관광
공약순위: 7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불용액 등 국방부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해결 2016년도 기준 GDP 대비 2.4%인 국방비를 3.5%까지 확대하고, 증액된 국방비를 방위력 개선 및 병영문화 개선에 투자	국방 통일의교통상
공약순위: 8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대부분 제도 변경에 대한 공약으로 기존 예산 전환 사용 가능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의 경우 미국의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3년 정도 개발 기간에 1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교육 내실화 사업(2017년 기준 1,990억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활용은 학교의 기존 ICT인프라를 사용하면 가능	교육, 과학기술 정보통신
공약순위: 9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활용 - 토지지원리츠 제도 활용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공약순위: 10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법·제도 개혁으로 별도의 소요 예산 없음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

기호 5 후보자명 심 상 정 (소속정당명 정의당)

순위	공약명	재원조달 방안 등	공약분야
공약순위: 1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별도 증액 예산 불필요	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공약순위: 2	튼튼한 안보, 적극적인 평화외교로 평화공영 시대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통일의교통상·국방

공약순위: 3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조세개혁은 다른 공약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임	재정경제
공약순위: 4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노동·여성(1)
공약순위: 5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사회 실현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노동·여성(2)
공약순위: 6	농어민·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농림해양수산·산업자원·건설교통
공약순위: 7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실현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보건복지
공약순위: 8	사람중심의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순위: 9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환경·문화관광
공약순위: 10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희망을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기타

※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공약 3번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의 이행방법 제1항 부가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항목(아래)에 조세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각 개별 공약에는 예산총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아래도 같다.)

-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 ②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2,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80%로 인상, 종합부동산세(국세→지방세)로 일원화하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중부세 수준으로 인상,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 (연 16.0조원)
- ⑤ 상속공제한도 5억원으로 축소, 가격폭등 시 증여세 재계산, 세대생략 할증과세 50% 적용(연 1.5조원)
- ⑥ 초과이익공유제 기업 공유이익의 30% 세액공제, 비정규 노동자 차별시정 등 처우개선 시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
- ⑦ 월세 비용과 서민 이사비증개수수료 15% 세액공제, 배기량 2천cc미만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 ⑧ 부담금 징수 단가 현실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 강화, 탈세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조달 참여 배제, 부정당 입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삼진아웃제 강화
- ⑨ 국민소송법 제정,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국가재정정보 상세 공개, 증액예산요청 의원 실명제 도입 및 쪽지예산 근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 구체적 10대공약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포털

대통령선거후보자 공약 참조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